



산업보건 주요뉴스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직업병,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1.(금) 오후 13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총장(김우승), 의무부총장(최호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충북(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최소 3개소, 한양대병원 11개소)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능한 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를에게 연계하게 된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산업보건협회 외

7개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처벌법" 여건 하에서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위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 외 7개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앞으로는 본사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사망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50인(역)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50인(역) 미만 사업장은 컨설팅·재정지원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소기업장과 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실태 및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근본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민간 재해예방기관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은 여전히 신규기관의 부실지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우수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기관등급별 차등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기관점검 면제 등을 통해 우대한다. 앞으로는 우수 민간기관이 추천한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 면제, 재정지원·컨설팅 대상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C, D 등급 등 부실 기관의 부실 지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정취소·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고 부실 기관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부실 기관과 계약한 사업장을 감독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량을 갖춘 우수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전문화·대형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 재해예방기관도 민간 재해예방 시장이 우수 전문기관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 재해예방기관 지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민간 재해예방기관 육성을 위해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민간 재해예방기관도 자체 투자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광주고용노동청) · 경찰(광주경찰청)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관련 원청 현장소장 구속,
하청 현장소장 영장 신청

광주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 ·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3.17.(목)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1.11.)와 관련하여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고,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전날(3.16.)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3.22.(화)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소식 보기

: 산업보건 주요뉴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12. 현장소장(원·하청) 2명을 입건 후,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현대 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하여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 3. 1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고용노동청은 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 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고,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5~11세 소아용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시작...접종은 31일부터 “기저질환 고위험군 기초접종 완료 권고...일반 소아는 권고 안해”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 통해서만...SNS 예약은 불가능

오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5~11세 대상의 소아용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한다”며 소아 기초접종 사전예약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접종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까지 해당된다”면서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군일수록 예방접종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5~11세 소아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있다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아 백신의 당일 접종은 보호자 동반 필수인 접종방식과 본인인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청소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5~11세 기초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시행 중이다.

먼저 24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 5~11세 소아 기초접종은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8주인데,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 간격인 3주 내로 접종할 수 있다. 접종방법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2.kdca.go.kr>)을 통해 예약 후 약 1,200곳의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접종 역량, 응급대응,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접종 안전성 및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주의사항 및 조치 사항을 안내하며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1,000명에게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만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은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또한 2차와 3차 접종 간에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일반 청소년의 경우 90일 이후, 면역 저하자는 60일 이후 접종한다. 12~17세 3차 접종은 현재 예약 접종과 당일 접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전 예약에 따라 접종할 경우 예약일을 기준으로 1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5~11세 기초접종에 앞서 실시한 관련 연구를 통해 소아접종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학부모 35만 9,11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접종 의향 있으며 최대한 빠른 접종 의향 있음'이 2만 5,079명으로 7%를, '접종 의향 있으나 조금 지켜보고 싶음'이 10만 4,723명으로 29.1%를 차지했다. 접종 의향 정도를 4점 만점으로 물어본 경우 평균 2.06점이었으며, 코로나19 감염과 백신 안전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부모의 접종 결정에 중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관리부실 사업장 엄중 조치 예고

고용노동부,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 나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동일한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4월까지 자율 개선 기간 부여 후 5월부터 집중 점검·감독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게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 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하여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와 함께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집중 확인(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세 가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

소식 보기

: 산업보건 주요뉴스

안전보건 조치는 유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중독사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소지 높아”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라면서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